

# 2017

# Report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08. part1 제 79 호

# Contents

## I . 정부 추진동향

- |  |   |
|--|---|
| 1. 규제프리존법 또 다시 부각 ?... 올해 국감서 쟁점 포함 가능   | 3 |
| 2.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 심천회 '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 | 4 |
|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검토                        | 5 |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  |   |
|--|---|
| 1.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신설 촉구                           | 6 |
| 2. 조병돈 시장 국회 찾아 지역현안 건의                        | 7 |
| 3. 경기 · 인천 현안 법안 이번엔 풀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폐지안 ) | 8 |

## III . 비수도권 ( 지역 ) 추진동향

- |                                   |    |
|-----------------------------------|----|
| 1. 어기구 의원 ,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철회 및 사과해야 | 9  |
| 2. 광화문 청와대에 충청권 반발                | 10 |

## 1. 규제프리존법 또 다시 부각 ?... 올해 국감서 쟁점 포함 가능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약사공론

**02**  
주요내용

### | 19 대에 이어 20 대에 다시 발의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법) 이 올해 있을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부각될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감정책자료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야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도 일면 거론될 것으로 예상
- 국회입법조사처는 규제프리존법의 주요 쟁점으로 크게 법 제정 관련, 네거티브방식의 포괄적 규정, 국민의 건강,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 등 총 4 가지 측면이 고려대상이라고 지목
- 법 제정 관련
  -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키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다만 이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
  -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를 이유로 반대입장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
  - 이같은 규정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
  - 이에 신기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임
- 국민의 건강 측면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허가 등을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과 관련
  -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수도권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수도권의 경우 인력, 자본, 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어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돼 있는 반면, 지역의 경우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규제프리존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 논의될지 주목
  - 미국이나 일본, 호주, 중국, 이스라엘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금융업 등 일부산업에서부터 지정된 구역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국내는 이를 국가에 비해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시사점

지역전략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지속적 건의 필요

출처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6141>

## 2.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심천회' 출신 송재호 제주대 교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chosun.com

**02**  
주요내용

###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석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송재호(57)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임명

- 지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부처의 지역 정책을 총괄 조정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
  - 장관급 위원장 1명에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등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신
- 송 재호 위원장
  - 관광경영학 전공자
  -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

관련기사

한라일보 2017. 08. 14

- 송재호 제주대 교수
  -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진 지역발전위원장에 제주출신이자 도민인 저를 발탁 한 것에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균형과 발전이라는 쉽지 않은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
  - 지역발전위의 모태이기도 한 참여정부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전국에 분산해 국토 를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주도적 의미가 강함
  - 이번에는 지역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원
  - 지역주도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분권 정책, 교육, 문화, 환경 부문을 포괄한 사람 중심의 균형 정책에 초점을 맞춤

시사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정부 인사를 임명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211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2114.html)

### 3. 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검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디지털타임스

**02**  
주요내용

#### | 13 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지난달 27~28 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의 일환
-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9 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보완해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 두 법안의 경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와 대기업 등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 쟁점사항을 얼마나 보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음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함
  - 다만,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집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 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시급성,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고려해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두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
  - 보수야당과 국민의당 등 대다수 야당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
  - 여야는 지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과 함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안전·환경·보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가 쟁점사항
  -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 일 성명을 내고 두 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
  -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규제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만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따라 민주당이 두 법안의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찬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

시사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402100457044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81402100457044001)

## 1.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신설 촉구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0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2 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

-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
- **시의회 결의문**
  -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인 경기북도 신설을 더는 늦추면 안 됨
  -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인 자치시스템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양주)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조속히 가결해야 함
- 경기북부는 모든 규제에 뒤여 낙후해 이를 손보지 않는다면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
-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 정책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
- 1980 ~ 1990년대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해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임
- 시의회는 이날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도 채택
  - 통행료를 협약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의 1.02 배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출·퇴근과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고 요구

시사점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 검토 및 대응 필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2/0200000000AKR20170802114300060.HTML>

## 2. 조병돈 시장 국회 찾아 지역현안 건의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8.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이천시

**02**  
주요내용

### | 조 시장은 1 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만나 5 건의 현안을 건의

- 국성남 ~ 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준공
- 백사 ~ 북여주 IC( 국지도 70 호 ) 도로 확포장
- 난개발 방지와 5 천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지 규제개선
- 전국에서 5 개 시군만 역차별하는 대학 규제 개선
- SK 하이닉스와 연계한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등
  
- 특히 조 시장은 이날 이천시 등 경기 동부권 발전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수정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요청
  - 수정법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5 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부합
  -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약 2 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분석결과 강조
  
- 전국에서 이천시를 비롯해서 동부권역 5 개 시 · 군에만 4 년제 대학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경기 동부권 주민은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
- 새 정부 공약은 주로 경기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개발에만 편중되어, 경기 동부지역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발전 전략이 없다고 밝힘
-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을 SK 하이닉스와 연계한 4 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고 첨단 테크노밸리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시사점

수정법 규제 완화의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주제

<http://news.icheon.go.kr/site/news/boardView.do?boardSeq=10&key=4304&post=282640>

### 3. 경기 · 인천 현안 법안 이번엔 풀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폐지안)

**01  
개요**

보도형식	보도자료	보도일자	2017.08.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이천시

**02**

주요내용

- 경기 · 인천 지역 의원들의 영원한 숙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20 대 국회에서도 추진
- 역대 국회에서처럼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 제출로 맞불을 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
- 경기 · 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폐지안)은 8 일 현재 총 7 개
  - 수정법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주)· 소병훈 (광주갑)· 박정 의원 (파주을), 자유한국당 김성원 (동두천, 연천)· 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갑),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
  - 수정법 폐지안 : 한국당 송석준 의원 (이천)
- 민주당 정성호 · 소병훈,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의 개정안
  -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로 지정해 수도권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
- 민주당 박정 · 한국당 김성원 의원 개정안
  -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 박 의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
  - 김 의원 법안은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
- 한국당 정유섭 의원 개정안
  -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용지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 송석준 의원 법안은 수정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골자
- 민주당 변재일 (충북 청주 · 청원) · 한국당 이현승 의원 (부산 부산진을)
  -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 변 의원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
  - 이 의원 개정안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

시사점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와 관련된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규제강화를 위한 논리적 대응 지원체계 구축 필요

출처

<http://news.icheon.go.kr/site/news/boardView.do?boardSeq=10&key=4304&post=282640>

## 1. 어기구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철회 및 사과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일보

**02**  
주요내용

### | 곁으로는 수도권 규제 주장하며 규제완화 법안 발의, 개정안 철회와 사과 요구 등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 파문 확산

-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 당진)은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당진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음
- 특히 당진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등 각계 인사 10명은 어기구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법안 철회와 당진시민에 대한 어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
- 또한 당진공인중개사협회 엄중섭 회장과 임원진
  - 어기구 의원 측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파문이 들불처럼 확산
- 어 의원 등이 지난 6월 26일 발의하고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
  -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 9개 시군으로, 서울을 제외한 한강이북의 거의 전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시 면적의 5.8배, 인구 143.9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고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입법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줄줄이 개정되며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압력과 주민, 기업들의 민원으로 많은 규제를 풀게 될 것이 예상
- 당진이나 충남권으로 투자이주할 기업들이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투자를 옮길 가능성은 불을 보듯 자명
- 어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지난 6월 30일 석문산단 활성화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시사점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의 지역 순회 토론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출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01984006572277073>

## 2. 광화문 청와대에 충청권 반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	보도일자	2017.08.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OhmyNews

**02**  
주요내용

- | 행정수도 건설의 마지막 기회, 내년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 :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계획은 올해 수립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는 것
  - 지난 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시기' 문제만 남았을 뿐 이전 계획은 확실해 보임
  -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
    - 광화문 청와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지 않고 행정도시로 만족하겠다는 뜻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개헌안에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의 최정수 상임대표
    - 지난 11일 청와대와 광화문 등을 방문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행정수도는 세종시해야 함
    -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거보다는 세종시로 가야함
    -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신을 잊는다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야 함
    -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 정부마저도 형식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우려도 있음
    - 실질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하며 그런 내용들이 내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힘

시사점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070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0707)